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 현안·갈등 해소 노력”

한라일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당선인(제주 시갑 송재호·제주시를 오영훈·서귀포시 위성곤)을 초청, 특별대담을 가졌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 선거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재호=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볼 때면 선거운동에 앞서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선거운동을 안 할 수 없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부친과 조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자꾸 쟁점화되면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도 됐습니다.

▶오영훈= 선거기간 내내 상대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사실 무근인 이야기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다 보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성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치렀습니다. 후보자이기 이전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유권자 여러분을 대면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직접 뵙고 그동안 해온 일을 말씀드리고 서귀포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당선인을 지지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경제난을 하루 빨리 극복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안에서 제주가 가려고 하는 속명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면 수정 등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포함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평가를 후하게 해주셨습니다.

▶위=지난 4년간 금급월래(금요일마다 제주의 집으로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코로나19 속 선거과정 어려움 함께 있었지만 성찰의 기회로 송재호 “제주형 제조업 육성” 오영훈 “안전한, 경제가 강한 제주” 위성곤 “서귀포를 바이오·생약 메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도입... 취지 못 살려 법 개정 이뤄져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는)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늘 서귀포시민과 함께해 서귀포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공약 5가지만 언급해 주십시오.

▶오=사회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제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희생자의 명예회복,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해운물류체계 혁신으로 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택배비 반값 실현으로 경제가 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분야별 출신학교급지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민이 제주도 현안과 정책 제시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우선 제주대 약대를 서귀포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주대 약대를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고 서귀포를 바이오·생약 메카로 조성해 제주와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감귤진피산업 육성 및 마늘 등 발효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공공 공유오피스 건립,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청년창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제가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린 게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권 및 예외적 특례 추가 확보, 제주 고유자원 활용한 ‘제주형 제조업’ 육성, ‘생활기반시설 복합화’로 품격



지난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송재호(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과 조상운 한라일보 편집국장이 특별대담을 갖고 있다. 강희만기자

는 삶 구현, 농산어촌 가치 ‘공익형직불제 연계 기본소득’ 지급 등 5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표적인 공약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선거기간 슬로건이기도 한 도민이 돈 버는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제주다운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크므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진출이 제약 받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오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논의 거부와 맞물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기존정당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의 엄중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취지에 맞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길을 터주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 위성정당 창당 금지 조항 등 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정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송=최근 제주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도 전에 변화를 맞이하며 도민 사회 내 여러 갈등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자세로 들여다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을 추구에 제주도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제주도내에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책무에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는 만큼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과 현안이 매듭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6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국가로부터 지방


정부에 권한이 대폭 이양됐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 미미, 교부세 3%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주민발안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주민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분권이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인구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은 이뤄졌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에 대해 제주도민의 책임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통해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이루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도(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망가진 환경·생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공감대·논의가 필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환경·평화·인권 등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면에 계속

보는 만큼 제주가 넓어집니다
읽는 만큼 제주가 달라집니다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연 대의원회장 김경진

수석부회장 김용범	부회장 이권호	고현심	이석재	김원	부의장 김동규	박재남
총무이사 윤진호	법제이사 이태유	학술이사 문이상	감사/중앙이사 이승희			
총무이사 송대성	공보이사 박철민	재무이사 주현이	사무처장 오석호			
의무이사 이정훈	공보이사 정구중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사무처간사 양은심			
의무이사 정유남	정책이사 박형근	정보통신이사 권태연				
보험이사 김창순	정책이사 이영일	특별사업이사 유현욱				
보험이사 한승태	학술이사 이재천	대외협력이사 심재현				

제주시 오라남로 45, TEL. 064)757-4640, FAX. 064)757-4590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행!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이상기

대의원총회의장 홍상철 대의원총회부의장 김성연

수석부회장 현경철 외무부회장 강준혁 내무부회장 문창민

내무이사(복지) 황학수	의무이사 정원근	무임소이사 안효수
보험이사 정성인	법제이사 김성진	무임소이사 이상훈
총무이사 이경원	약무이사 최우석	정보통신이사
재무이사 이창승	홍보이사 정덕희	
홍보이사 최미영	홍보이사 박준상	감사 김성중
국제이사	국제이사	감사 김성은

제주시 국기로 36 성은빌딩(4층) TEL. 751-3545, FAX. 751-2579